

시도지사 경선 비용 떠넘기기?

새정치, 후보자에 수억~수천만원 비용 부담하게

“유능한 후보 당선 보장 선거공영제 위협” 지적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경선이 대한민국 현법에 보장된 ‘선거공영제’의 기본취지에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정치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선거공영제가 서서히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당내 경선에서부터 수억원에서 수 천만원의 공식 경선비용을 후보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광역의원 선거는 공론조사식 배심위제(이하 공론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동원 등을 배제하고 지역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경선 비용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의 경우 ▲공론조사 50% + 국민여론조사 50% 반영안 ▲ 100% 공론조사 반영안 ▲ 권리당원투표 50% + 여론조사 50% 반영안 ▲ 100% 국민여론조사 반영안 등 4가지 경선방식 중 하나다.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후보 경선도 이 4가지 경선 방식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단체장 경선 배심원단 수자는 광주는 2300명, 전남은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의원 배심원단은 인구가 적은 지역은 200~300명, 많은 지역은 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선거공영제(選舉公營制)

공선거제라고도 한다. 보통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의 작성 배부, 선거공보의 발행 및 그 발송, 연설회의 개최 및 그 연설장의 무료대여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합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럴 경우 광역의원 경선에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서 공론조사에서 배심원단들이 현장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장소 대여비 및 행사 진행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까지 병행된다면 경선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론조사의 경우 최소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1명당 21만원이 소요돼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여론조사 1곳 만 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소 3곳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면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후보 1인당 최소 2억원 정도의 경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광역의원 경선에서도 후보 1인당 1000만원 이상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이같은 비용을 경선 참가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인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위해 한 후보자당 1억2000만 원씩의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새정치 기초선거 무공천 관련

시민단체 후보 평가·추천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가 입후보자 평가와 추천에 나서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등 10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시민공천추진위원회’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시민참여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민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천추진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다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비후보들을 평가하고 컷오프, 1차, 2차 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옛 새정치연합 지지도원으로 알려진 새정치실천연합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6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검증되지 않는 후보 경선은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보현, 광주시의원 재선 도전 돌입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 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재선 도전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비정규직 지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영세자영업 지원 대책 강화, 입찰행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7대 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이용섭, 경선 후보간 공명선거협약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용섭 의원은 3일 “경선 후보 간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공명선거실천협약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경선은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처음 치르는 경선인 만큼 광주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정치 경선 모델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발전 함께 고민하겠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3일 “이병완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지한 ‘새정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광주에 새정치가 시작돼야 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광주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이 전 실장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길은 달라도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건강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송명태 “주민 편의·주민 대변 구청장 되겠다”

송명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구청장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주민을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법 주정차를 무차별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건축물에 무조건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보현, 광주시의원 재선 도전 돌입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 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재선 도전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기간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연구회 등을 통해 지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미남,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김미남 광주시의원(광산구 3선거구) 예비후보는 3일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활동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제도개선과 행정개혁에 기여하고자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 광주군 공항 이전 ▲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지역 개발 ▲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광산교육청 원상회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영호,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김영호 주남LPG충전소 대표는 3일 ‘세계속의 광주, 부활하는 동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시의원(동구 2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인 김 대표는 “▲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한 문화 중심 동구 ▲ 소중한 5·18 자산 활용한 민주·인권·평화의 중심 동구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

야권 ‘기초선거 전폐’ 우려

‘무공천’ 촉구 투쟁 강화 불구 여권 요지부동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야권 전체가 ‘기초선거 전폐’ 위기에 빠져있다. 여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슈에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층 일부 강경 의원들은 ‘무공천’ 관찰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아관 한편에선 전례는 없는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후보’ 추천의식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기초선거를 위한 ‘풀뿌리 정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국회의원 1명만 이 정당에 가입하면 기호 5번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은 2번, 기초는 5번’으로 야당 후보가 정리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에 공

천권을 넘기 뒤 선정된 후보에게 ‘시민후보’ 명칭을 부여하자”고도 했다.

당내에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 단일후보를 선출하자”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당 조직국에서는 기초단체장을 시민사회 도움을 받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기초의원은 ‘적격 후보’를 선정한 뒤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적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경쟁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2일 당이 지방선거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지방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표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선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 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 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헌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티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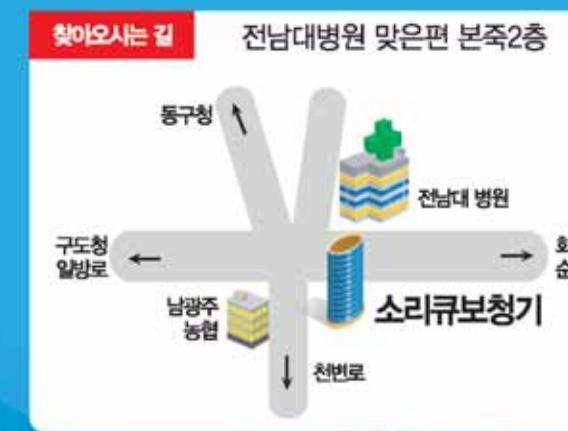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soriQ

소리큐 보청기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 때 대화 · 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광고심의필 2012-10-18-1326